



## “악화일로 근로여건 개선하라”

### 노사, 2009년 단체교섭 돌입

연합뉴스 노사는 2009년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노사는 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하고 10월29일 경영진과 상견례를 가졌으며 11월 10일과 12일 두 차례 실무협상을 벌였다.

노사는 집행간부 회의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휴가 이행 보장, 취재.업무 지원 강화, 복리후생 상향 조정 등 크게 3가지 부문에 걸쳐 총 9개의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사는 앞으로 실무협상을 통해 의견을 접근시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노사협의회에서 조인식을 갖고 2009년 단협을 마무리짓는다.

노사는 이번 단협에 나서며 경제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언론사들과 고통을 나누는 한편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감안해 통상적인 임금 협상을 앞당겨 지난 6월 올해 임금을 동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사는 또 이번 요구안이 근무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최소 권익을 보장하고 임금 동결로 인해 실추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사 상견례에서 한승호 노조 위원장은 “지난번 임금 동결시 노조도 경영환경 변화에 직면한 회사 경영진의

고충을 이해하고 다른 언론사와의 상생도 도모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아직까지 임금 동결의 의미에 대해 사원들이 되새기고 있는 만큼 사측이 노조의 단협 요구안을 적극 수용해 악화일로에 있는 근로여건 개선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촉구했다.

박정찬 사장은 “(사옥 재건축과 보도전문 채널 진출 등) 큰 일들이 벌어졌고 계속 추진 중인 만큼 허리띠를 졸라 매고 희생을 해야하고 여건도 어려운 시기”라며 “살릴 건 살리면서 노사가 힘을 빼지 말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다음은 노사가 사측에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이다.

- ◇ 휴가 보장.확대 대책 마련
- ▲보상휴일 금전보상 선책제 도입
- ▲의무휴가 이행 강제와 금전 보상 확대
- ▲출산 휴가 일수 확대
- ◇ 취재.업무 지원 강화
- ▲취재 교통비와 대외 업무 추진비, 회의비 인상
- ▲지방 단독 주재 주거비(전.월세) 실비 지원
- ▲일직에 이은 숙직자 오전 휴식 보장.실질적 이행 대책 마련
- ◇ 복리 후생 상향 조정
- ▲건강검진 사후 관리시스템 도입
- ▲검진 가능 범위 확대와 검진비용 상향
- ▲자기계발비 상향 조정

## 사내 ‘복지 사각지대’ 줄여야

### “파견사원 등 비정규직 대책도 필요”

회사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 근로여건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원들은 사내 복지제도 미비로 인해 기본적인 권익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을 자녀로 두고 있거나 결혼 후 자녀를 갖지 못한 사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한 학자금 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는 정부가 초.중.고교 과정의 특수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장애인 자녀가 유치원 과정부터 사설 교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내 복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초.중.고 학령기 이후 정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직업 교육기관 등을 다니는 경우에도 최소 복지기금의 학비 범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

도 나왔다.

자녀 출산 의지는 있지만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경우에도 결혼 뒤 상당기간 반복해서 불임 시술을 받고 있는 가정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무 내용이나 노동 강도가 유사한 연봉직 사원과 계약직.파견 사원들 간 임금 격차로 인해 계약.파견 사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회사가 적극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비정규직 사원들의 고용안정과 체계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정규직법에 따라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의 기로에 서게 되는 파견사원들과 함께 일하는 조합원들은 “계속 고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파견사원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고 회사 차

원에서도 숙련된 인력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파견사원은 근무시간, 휴일근무, 수당에 대한 수수료 공제 등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호소했다.

파견사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연합뉴스가 파견사원의 급여나 수당을 파견업체에 주고 파견업체가 수수료를 떼 뒤 파견사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파견업체가 수수료를 과다하게 공제할 경우 파견사원의 임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파견업체와 좀 더 정밀한 계약을 맺고 계약사항 이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사는 사측과 협의를 통해 사내 복지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

대를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관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 연합뉴스 편집위원회, 26일 첫 회의

연합뉴스의 사내 공정보도 논의기구인 편집위원회는 11월 26일 첫 회의를 갖고 편집규약에 따른 세부 운영 규칙 등을 논의한다. 노사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당초 10월 29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가족이 신종플루 확진을 받은 노측 편집위원 2명이 재택 근무에 들어가는 바람에 순연됐다. (관련기사 4면)

# “사옥 재건축, 보도채널 추진..고충 가중 우려” 노조, 다각적인 대응 방안 검토키로

사측이 사옥 재건축과 보도전문 채널 진출을 동시에 전격 추진함에 따라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원들의 고충 가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노동조합은 9월28일 제2차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본사 7층 회의실에서 대의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는 활동 보고, 사측의 경영 설명, 안전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대의원들은 보도채널 진출시 사업성,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방안, 근로조건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특히 임금 동결에 이어 사측 주도의 ‘고통 분담’, ‘허리띠 졸라매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사내 전반에서 일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본사 인원 감축, 방송 추진시 자회사로의 전보 발령, 방송 리포팅 등으로 인한 업무 가중 등이 그것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보도전문 채널 진출과 사옥 재건축에 따른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고 향후 조합원들에게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대의원대회에

서는 장익상 경영기획실장이 중요 현안인 사옥 재건축, 보도채널 진출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박정찬 사장이 대의원들과 문답을 주고받았다.

박 사장은 보도채널 진출에 대해 “지금은 영상과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시대”라며 “텍스트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옥 재건축에 대해선 “현 사옥은 안전에 문제가 있고 영상 보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며 “텍스트와 동영상을 같이 해야 시대에 맞는 통신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우리가 방송을 하면 아주 공정하고 다

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두 문제 다 회사로선 중차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설명회가 끝난 후 대의원들은 보도채널 진출, 사옥 재건축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두 사안이 회사 장래와 직결된 만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사측이 추가적으로 더 많은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대의원들은 또 보도 채널 진출 및 사옥 재건축과 관련해 노조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노조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노조는 정보가 거의 없다. 사측에 더 다양한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또 한 대의원은 “사옥 재건축은 이미 전 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쳤다”며 “노조가 보다 앞서서 회사의 중차대한 현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사옥 재건축 비용 마련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 보도채널 진출시 세부 사항들에 대해 노조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고 조계창 조합원 1주기 추모사업

연합뉴스 노사는 고(故) 조계창 조합원 1주기(12월2일)를 앞두고 ‘조계창 사우 추모사업’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실무팀은 노조가 추천한 2명과 회사에서 추천한 에디터급 간부 1명, 경영기획실 사원 1명 등으로 구성된다.

노조는 이에 앞서 조 조합원의 1주기를 맞아 ▲추모집 발간 ▲사내 추모식 거행 ▲‘조계창 기자상(賞)’(가칭) 제정 ▲조형물 제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모사업안을 마련, 사측에

공동 행사 추진을 제안했다.

노사 실무팀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 조합원은 중국 선양(瀋陽) 특파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중국 옌지(延吉) 출장 취재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순직했다.

회사는 조 조합원에 대해 재직 시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하여 차장으로 추서 했으며 회사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 연합인포맥스, 소액주주 주식 사들인다

연합뉴스 자회사이자 국내 최고의 리얼타임 금융경제정보 전문 매체인 연합인포맥스는 12월 중 연합뉴스 사원을 비롯한 소액주주가 갖고 있는 인포맥스 주식을 주당 1만2천원에 사들이기로 했다고 11월 12일 밝혔다.

연합인포맥스 관계자는 “상장이 늦어지면서 인포맥스 주식 처분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 지난 9년 간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에게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합인포맥스가 상장 요건을

이미 갖추긴 했으나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정확한 상장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주들은 이번 자본 감소(감자)진행과정에서 보유주식 매도여부를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인포맥스는 또 이번 감자에서 주당 매입 가격을 2000년 6월 회사 설립 당시 주식 발행 이후 연 10% 복리로 계산해 산출했으며, 이번에 사들이는 주식 모두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회사 현안에 대한 박정찬 사장의 기초발언과 문답>

## ▲ 기초발언

회사가 추진하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사옥 재건축, 또 하나는 보도채널 진출 문제다. 둘 다 회사로선 아주 중차대한 일이고, 대의원은 물론이고 전 사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다. 그런데 사실 두 문제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고 급히 이런 논의에 들어가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3월 22일 취임하고 4월에 법이 통과됐다. 그리고 나서 두 사안 중 하나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금년 내로 방송 사업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고 우리 입장을 결정해야 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또 사옥 문제는 일일이 설명해서는 곤란한, 말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이심전심, 무언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실국장 회의에서 제기하고 부장들 통해 사원들 의견을 올리라고 해서 약식으로 진행했다. 보도채널 진출, 사옥 재건축은 아마 크게 반대할 사람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생략된 데 대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견이 있으면 기탄없이 얘기해 달라.

## <문답>

-- 사옥 재건축과 보도채널 진출로 구성원들은 또다시 고통을 나눠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구성원에게 부담이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말해 달라.

▲ 기본적으로 이미 벌써 희생을 하고 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 임원들의 희생은 더 컸지만, 임금을 동결했고 일부 부장들은 보너스 일부를 반납했다. 우리가 사옥을 재건축하면 국가 기간통신사로서 법에 정한 대로 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국가 보조를 받아서 사옥을 짓겠다고 얘기하는 마당에 우리 스스로 내뱉어야 할까 또는 허리끈 졸라매기가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사옥 재건축이라는 큰 일에,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희생이 그렇게 길게까지야 가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려야겠다.

사실 사옥 문제는 피곤하다. 안전진단 D급이 나온다. 위험하기도 하다.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옥으로 안된다. 사옥을 왜 짓느냐. 이제 영상하고 같이 해야 한다. 사옥을 새로 지어야 '텍스트 + 동영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지어선 따라갈

수 없다. 새로 짓는 건물은 하루빨리 지어야 하고 그 건물은 서로 연결돼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지금 시대에 맞는 통신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몇 년 뒤에 하자는 건 안 된다. '히어 앤 나우(here and now)'가 아니면 안된다.

-- 방송은 인력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인력으로 방송하려면 근로 여건의 문제가 많은데 보완대책은.

▲ 저는 우리가 보도채널로 방송하는 게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한다. 처음 YTN 만들었을 때는 회사의 덩치에 비해 망토처럼 옷이 좀 컸다. 당시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망토를 입고 가다가 IMF 위기가 오는 바람에 넘어져버렸다. 그게 우리에게 큰 경험이고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장비의 가격은 당시의 20분의 1이다. 옛날에 투자했던 데 비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인력도 어차피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용)하겠지만 기존 사원들이 도와줘야 한다. 물론 방송 잘하는 사람도 영입할 것이다. 영상에 관한 한 멀티뉴스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급격하게 일거리를 늘려서 아무것도 못하게는 안 될 것이다. 면밀하게 따져서 열심히 하되 지금 하고 있는 건 살려서 가면 무리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보도전문 채널 개국 초기 비용은 얼마 정도로 추산하는지.

▲ 종합편성채널은 아마 최소 3천억~4천억원에서 시작할 것이다. 보도채널은 최대 1천억원 정도 될 것이다. 우리 콘텐츠 생산하는 기자들과 설비, 건물 등을 현물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을 것이다. 사옥은 전체 800억원 든다고 하면 몇백억 정도는 기채해야 할 것이다.

-- 보도전문 채널에 진출하면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 방송의 경우 지금 거의 광고시장이 제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종편이 늘어도 고민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도채널의 경우 종편보다는 뽀뽀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지금 시대가 영상과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경영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

-- 만약 잘못됐을 때, 예를 들어 보도전문 채널의 파이가 너무 작다거나 하는 상황이 돼서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지.

▲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아까 얘기한대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가겠다. 그렇게 갈 경우 설사 광고시장이 안 좋아도 괜찮을 것이다. 또 하나는,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텍스트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가는 것이다.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IPTV까지 할 경우 중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렇게 가야 하고, 그렇게 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보도전문 채널을 만든다는 게 YTN처럼 24시간 보도채널을 만든다는 것인지. 어떤 보도채널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포지셔닝한다는 것인가.

▲ 그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방송기획팀이 답을 써야 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욕을 안 먹는 연합 텍스트의 연장선상에서 공정하고 빠른 방송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는 보도채널들보다는 다양하게 할 것이다. 지금 60명의 특파원이 나가있고 지방에 많은 기자들이 있다. 또 6개국어 뉴스 서비스가 되니까 기술적으로 바로 다중언어로 보도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지상파의 경우 저녁 9시 뉴스에서 23쪽지를 보도한다고 하면 그 중 국제뉴스 보도는 한쪽지 반 정도다. 이걸 국민의 국제뉴스 흐름을 제대로 찾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면 아주 공정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보너스도 좀 더 나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 또 사전에 공감대를 이뤄가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오지 못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방송 진출 안 하고, 사옥도 이사하지 않고 여기 그냥 있는 게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안 하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 같다. 저 스스로는 힘들지만 앞장서서 하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밀어주기를 당부드린다.



# 연합뉴스 13개 지방취재본부 순회 보고서

연합뉴스 제22대 노동조합은 5월과 6월 전국 13개 지방취재본부를 순회하며 조합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지방 조합원들은 △인력구조 불균형 심화 △지역사회 영향력 저하 △균형감 있는 공정보도 필요 △지방조직 광역화 반대 △계약직 여직원 처우 개선 △기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다.

노조는 이 같은 지방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회사측에 전달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 인력구조 불균형 심화 - 조직이 늙는다

지방 취재본부에서 기자직의 경우 '고참'만 늘고 '현장의 발'은 줄어드는 인력 불균형 구조가 심해지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13개 취재본부 기자직 총원 113명 가운데 차장대우 이상은 72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고 평균 나이는 36%인 41명이었다.

여러 해 신입기자 충원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선임자층은 두터워지고 활발하게 현장을 누벼야 할 평기자층은 상대적으로 얇아졌다. 더욱이 순환 근무제 폐지에 따라 이들 평기자 가운데 상당수가 회사로 복귀한다.

회사가 적극적인 인력구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 같은 불균형 구조는 점점 심해져 지방조직의 경쟁력 저하와 근로여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대부분 취재본부

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 ■ 지역사회 영향력 저하 우려

국가기간통신사가 됐지만 지역사회에서 연합뉴스의 영향력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지방 조합원 상당수의 주장이다. 인력 감소와 더불어 연합뉴스 기사에 대한 전제 계약사가 줄고 있는 점이 영향력 저하의 원인으로 꼽혔다. 인력은 점점 줄고 있으나 본사 취재지시나 '페이퍼 워크'(일정보고 등)의 요구는 늘어난데다 취재 외적인 업무 또한 만만찮아 다양한 기사를 발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영난을 겪으면서 저가로 기사를 제공하는 뉴시스나 노컷뉴스 등이 지역 언론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언론사의 기사 전제계약은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 2000년 38개이던 지방지 계약사는 올해 34개사로 줄었다.

지방 직원들은 연합뉴스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위협받는 상황을 좌시할 게 아니라 지역언론과 상생을 도모하는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 균형감 있는 공정보도 노력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국회통과(2009년 4월30일)를 전후해 일부 보도에 균형감을 상실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 조합원들은 "보도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은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잃는 것은 순간"이라며 연합뉴스가 공정보도에 대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열악한 지방언론과의 상생과 고통분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보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방 조합원들은 노조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균형감 있는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고 사내 공정보도 기구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 ■ 지방조직 광역화 추진 반대

회사가 인력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지난 4월 제시했던 지방 광역화 개편안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높았다.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력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지방조직 광역화는 이미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다 연합뉴스가 수십 년 동안 쌓은 지방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고 회사 차원의 사업부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 ■ 계약직 여직원 처우 개선

지방조직이 광역본부에서 지사 체제로 전환될 당시 각 취재팀에 소속돼 있던 여직원들이 용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 똑같은 사무 보조업무를 하는데도 광역본부 소속은 연봉사원으로 전환됐지만 이들은 최대 9년째 용원으로 일하고 있다.

경기북부, 인천, 울산, 경남,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8개 본부 여직원 6명은 4~9년째 용원으로 일하고 있고 2명은 최근 1~2년새 입사해 같은 신분으로 근무 중이다. 이들은 연봉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보다 근무연한이 적은 다른 본부 여직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휴일근무 수당 등에서도 불이익을 겪고 있다.

### ■ 기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직원들은 연봉사원의 노조 가입을 조직 통합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실질적인 휴가 결재 권한을 현 지 사정에 밝은 취재본부장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이나 노조 복지기금 대출금리(연4%)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방본부의 단독 주재지역 사원에 대한 주거비 현실화가 시급하고 취재 교통비 상향조정도 필요하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노조원들은 본사-지방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노사 모두 활발한 대화채널 구축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편집위원회 어떻게 운영되나

연합뉴스의 편집권 독립과 공정보도를 위한 사내 논의기구인 편집위원회가 구성돼 11월 첫 회의를 연다.

편집위는 회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구체적 구성과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미 마련된 편집규약에 따른다.

이 규약은 편집인(편집상무)과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각 5인 이내 노사동수 위원으로 편집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10월 14일자로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을 겸임 발령했다.

위원은 김성수 편집상무, 박노홍 편집국장, 이선근 편집국 정치분야 에디터, 김용수 편집국 사회분야 에디터, 조복래 정치부장(이상 사측), 김태식 문

화부 차장, 이주영 국제뉴스2부 차장, 문성규 사회부 차장대우, 정성호 경제부 사원, 이울 증권부 사원(이상 노측) 등이다.

편집위는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편집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 안건은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한다.

편집위가 논의할 사항과 주요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뉴스통신의 독립성, 공정성, 공익성 훼손이다. 둘째, 편집 과정에서의 내부 구성원에 의한 자율성 침해다. 셋째 편집 과정에서의 공정성, 공익성을 심의한다. 넷째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과 논란을 조정한다. 다섯째 그 밖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특히 편집규약 제7조(편집위원회의

조직 및 의결 방식)는 '편집위원회는 의결로써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편집위원회의 활동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했다.

편집위원회는 노사 동수 정신에 따라 위원장 없이 '노사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되며 회의 주재는 연장자인 사측 대표가 한다.

회의 내용과 의결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